



##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2014.06.15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규제완화, 복지와 사회정책의 축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개편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도와달라”는 호소는 정녕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인사는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제관료 시절부터 일관되게 서비스 사업 민영화를 추진해왔던 ‘최경환’ 현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 것 등이다.

6월 11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sup>1)</sup> 아직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에 따르면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등의 부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611. 국회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안 제19조제1항·제3항, 안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와 같은 부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사회부총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비경제분야 모두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행적, 그리고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사회부총리 제도, 거기에 막중한 임무에 비해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사회부총리에 임명한 것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개편은 규제완화, 서비스분야 민영화, 복지정책 후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규제완화, 민영화 전도사 경제부총리

먼저 ‘최경환’ 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면서 사회서비스투자활성화대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인물이다. 에너지, 산업정책, 지식·사회서비스, R&D 등을 총괄하던 지식경제부서의 책임자 시절, 규제완화, 서비스사업 민영화, 4대강사업 추진, UAE 원전 수주 등을 총괄해왔다. 모두 대기업과 투기를 위해 규제를 풀고, 핵심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전 국토를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사업들이었다.

최 내정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기 부양 사업’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예산 통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09.12.11. 서울 프라자호텔, 코리아 미래재단 주최 조찬 강연)라면서 영리병원 도입도 밀어붙였다. UAE 원전 수주는 심각한 부정 거래 의심까지 받고 있으며,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사항으로 인해 밀양 고압송전탑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1. 최경환 내정자의 과거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련 발언들

- 11월24일: 최경환 장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 ▲11월25일: 최경환 장관 "과감한 규제완화로, 더 좋은 경영환경 조성 (법인세율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 경제자유구역 등 규제 없는 지역 확대, 노사관계와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수준으로 개선 등)
- ▲12월1일: 최경환 장관 "가장 효과적인 규제완화는 감세정책(외신기자 간담회)
- ▲12월11일: 최경환 장관 "산업전략변화 핵심은 노사관계(코리아미래재단 주최 강연)
- ▲12월29일: 최경환 장관 "원전산업,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3,4호기 원전건설현장 방문)<sup>2)</sup>



"의료민영화논란, 과담배포"(연합,2014.1)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철도 민영화 과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과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 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상의 언행을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의료, 환경, 노동 등의 문제를 철저히 경제이윤의 시각에서만 보는 시장주의자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국민의 합의, 환경적 검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인물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면서 교육, 복지, 의료, 노동, 여성, 문화 등의 영역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게다가 그 수장으로 관련분야 전문성은 전혀 없는 보수적 교육학자를 임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편협하며, 각각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의 하위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2. 준비되지 않은 사회부총리

사실, 사회부총리는 그동안 진보와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참여정부 중반기인 2005년 대통령 자문위에 제출된 사회양극화의 국가적 대응전략 연구<sup>3)</sup>에 따르면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사회부처 장관회의에 보다 공식적인 기능과 예산조정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책의 위상을 강화<sup>4)</sup>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외대, 행정 부처, 국책 연구소,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각종 조직을 총괄하는 사회정책 총괄기능이 미흡함. 이에 따라 정책입안·추진 주체들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발생. 지문 및 실행조직의 파편화와 연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총괄기능이 미흡하며 그 결과는 사회정책 분야에 일방적인 경제정책 논리의 관철, 그리고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의 실질적 폐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회정책과 관련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정부측 위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운데 경제부처 위원

2) 이상 [최경환 취임 1주년] 말·말·말①... "맛있는 정책 만들어라" 뉴시스, 2010-09-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17\\_0006203136&cID=10401&pID=104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17_0006203136&cID=10401&pID=10400)  
 3) 김진수 외, 2005. 사회양극화의 국가적 대응전략 연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보고서.

들은 사회정책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민간위원들은 전문가 등 개인 자격이 대부분으로서 노동, 복지수혜자 등의 대표 참여에 의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정책 총괄기능의 강화: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사회부처장관회의에 보다 공식적인 기능과 예산조정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책의 위상 강화.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이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능 강화. 이를 위해 대통령 혹은 총리 주도로 경제, 사회분야의 핵심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경제-사회정책 조정회의 신설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2013년 2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제2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 재정 통제를 부쩍 강조하는 반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복지가 재정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는 2006년 "한국형 신성장 동력 사회투자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과제"<sup>4)</sup>를 통해 정부조직 및 예산조직 개혁 방안으로서 사회부총리를 도입하고 경제영역과 독자적으로 예산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도 사회정책 통합조정을 위해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sup>5)</sup> 예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과는 달리, 이번 박근혜 정부의 사회부총리는 단순히 사회영역으로 묶일 수 있는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한 것 이외에 사회영역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권한 없는 사회부총리

이번 사회부총리 인사는 사회정책을 성장주의자, 시장주의자 중심의 경제부처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을 한 연후에 일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닌, 사회발전에 대한 발전상과 그에 기초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같은 가치들을 실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사회구조적, 시스템적 고민과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06  
 5) 이명박 당선자 정부조직개편안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 대안 - 경제부처권력 비대화 막고 사회부총리 신설해야. 국가재정의 50%이상을 담당할 사회정책 분야에도 부총리 필요. 교육, 복지, 노동, 여성 분야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 신설해야.



하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정책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작년, 진영 전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항의로 장관직을 사퇴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형근 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여권출신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정책은 경제부처에 종속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원인은 예산권과 인사권에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사퇴하면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인사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력감이 컸다.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꼭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꼭 쥐고 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sup>6)</sup>고 밝힌 것에서 그 일단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복지제도의 핵심인 공적연금과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교육정책과 같은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재정기획부로 대표되는 경제부처들이었다.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은 재정부의 “사회서비스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추진되어 왔고, 노동정책에서 노동부는 아예 소외되어왔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 원미 갑)은 12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고용정책의 주무부처가 누구인가?”라고 질책하며 “고용률 70%의 성공은 기재부식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sup>7)</sup> 환경이나 여성 정책 역시 경제 성장과 저임금 노동정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권,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부총리제도를 단순히 신설하기만 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앞서 말한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가 경제와 사회 두 토끼를 잡으려다 경제에 종속되어갔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체의 혼선과 한계는 상당 정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한편으로는...(중략) 시장기능의 신장과 효율성의 추구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야 한다는” 경쟁력 담론 “이 주로 경제장학부서를 중심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력 추구가 가져오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에 대처하여...(중략) 사회안전망의 강화, 동반성장 모델의 구축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회통합 담론 “이 사회정책부서와 정책자문그룹 중심으로 존재함...(중략) 사회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파장적 공세에 정부의 반응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임...(중략) 그 결과는 성장 우선론의 재확인 또는 강화로 이어져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sup>8)</sup>”

6) 새누리 일각서도 “기초연금 후퇴 대통령이 사과해야”. 중앙일보, 2013.09.25. <http://linkis.com/nRv5>  
7) 김경협의원실 보도자료 고용부장관이 부르면 안오고, 기재부 차관이 부르면 달려가고, 20131031 기재부, 사실상 고용정책 주도 기재부 차관 주관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에서 총괄  
\* 15개 부처 차관급회의, 매월2회 운영, 규정도 없이 운영중.  
8) 김진수 외, 2005. 사회양극화의 국가적 대응전략 연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보고서.

다음으로 교육부가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사회분야 부총리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되었다.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면서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부총리이기는 하나, 사실상 교육과 인적자원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로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지는 않았고, 그나마 앞서 지적한대로 예산권이나 행정집행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교육·사회·문화가 사회분야로 포괄될 수 있는지,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총괄자의 기준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교육·사회·문화·고용, 이런 소프트파트의 정책분야의 조정”을 언급했다. 경제와 안보, 공직인사 등을 제외한 “소프트”한 분야를 단순 모아놓은 것이다.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은 분배문제이다. 고용과 노동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1차분배),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2차분배)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 인적자원 개발(교육)이나 일-가정양립을 비롯한 여성문제 등이 추가된다. 영역별 전문성과 핵심 이슈인 노동·복지·재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이 요구된다. 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인물이 관련 업무에 종사해본 적도, 능력도 전혀 없는 보수적 교육학자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정책을 단순 “소프트”한 분야로 치부하고 정부의 충실한 대변인을 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 정당성 없는 정부조직개편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이창원 등은 정부조직 개편이 가져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9)</sup>

첫째,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차원에서 합목적성에 근거한 기능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기능적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조직개편은 조

9) 이창원조문석, [시론]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전망, 계간시대정신, 2013년 여름호



직 운영과정에서 목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은 기존 정부조직 내외의 권력배분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과 가치관을 지닌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도 (제도적)정당성이 결여된 정부조직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 국정목표로서 국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고 있다. 우선 국가개조는 비정상상의 정상화,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대표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뜻 혁신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는 하지만 실상은 박근혜 정부 초기 집권전략에서 강조해 왔던 ‘비정상상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4월 29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국가부채를 이유로 긴축재정 운용 등의 정책추진을 공식화했다. 결국, 세월호를 핑계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떠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등이 목표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이 연상되는 이 목표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키로 하고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 내수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과제로 제출했다.

역시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수출중심, 투자 중심 대책이다. 내수기반확대와 고용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시간제일자리의 확대가 유일하며, 대신시기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아예 사라졌다. 이런 국정기조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사회부총리를 선정했다는 것은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공부문 개혁, 민영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소위 “소프트”한 분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정 과정이 부재했던 것 또한 문제이다. 유민봉 수석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곧 사회적 공론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부총리의 관장을 받게 될 부서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래부관계자는 “현재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미래부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산하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다”며 “내일 중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sup>10)</sup> 즉,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깜짝 인사에 불과한 것이며 사회적 논의는 전혀 거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심각한 불평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어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을 전전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심각한 사회 불안정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조세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를 위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적 교육학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고 “소프트” 분야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회문제, 분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 권한 없는 무능력한 인물을 올려놓고 사회분야의 민영화와 복지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성장 중심의 기조를 내려놓고 분배와 사회안전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10) 미래부, 비경제 총괄 부총리 산하로...왜?, 2014.05.2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40527185801](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40527185801)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6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